

[경제인칼럼] 농촌공간계획, 경남 미래 농촌 준비의 초석- 손영식(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박준혁]

경제인칼럼



봉세권(걸어서 봉어빵을 살 수 있는 지역), 역세권(지하철역 인근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 쿠세권(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주인구가 많고,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편의성이 우수하고, 주거 안정성이 높은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반면 농촌특화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투자진흥지구는 이와 대비되는 용어들이다. 수도권과 거리가 있는 시군, 시·도에서 소멸화되어 가는 지방을 소생시키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 용어들로서 과소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표현들이다. 특히 농촌특화지구는 농식품부가 2023년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촌공간을 주거, 축산,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로 재구조화해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정돈된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시군은 시군 전체 지역을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은 공간이용, 수요, 개발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의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될 것이

다. 농촌공간계획은 가깝게는(시행계획)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사용되지만, 멀게는(기본계획) 지역의 현재를 진단하고 과소화, 난개발, 지역침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농촌지역이 재탄생되는 단초로서 사용될 것이다.

경남에서는 올해 3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 양산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러 오고 싶은 도·농 교류, 매력 양산'을 비전으로 남서부권은 거점기능 및 배후마을 연계 강화, 북부권은 역사·문화 관광 및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의령군은 '함께 즐기는 힐링 라이프! 함께 나누는 스테이 의령'을 비전으로 의령지역은 문화·관광 네트워크 강화, 부림지역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미래산업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합천군은 '사람·자원·기회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꾸는 참살이 농촌 합천'을 비전으로 북부지역은 노후 농공단지 및 농촌마을 재정비, 동부는 대구권 농촌관광 기반 육성, 중부는 선도농업 기반 조성, 남부는 관계 인구 유입 및 유동물류 중심지 도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 13개 시·군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 의견수렴은 되는지, 특화지구 지정이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이 체감하는 계획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주체가 함께 고민해서 만드는 농촌공간계획은 삶터·일터·쉼터로서 달라진 경남의 미래가 될 것이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또한 경남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으로서 살기 좋은 미래 경남 농어촌 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손영식(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